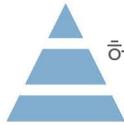




WP 21-16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bauiro@mokwon.ac.kr)
허동숙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dshuh@krihs.re.kr)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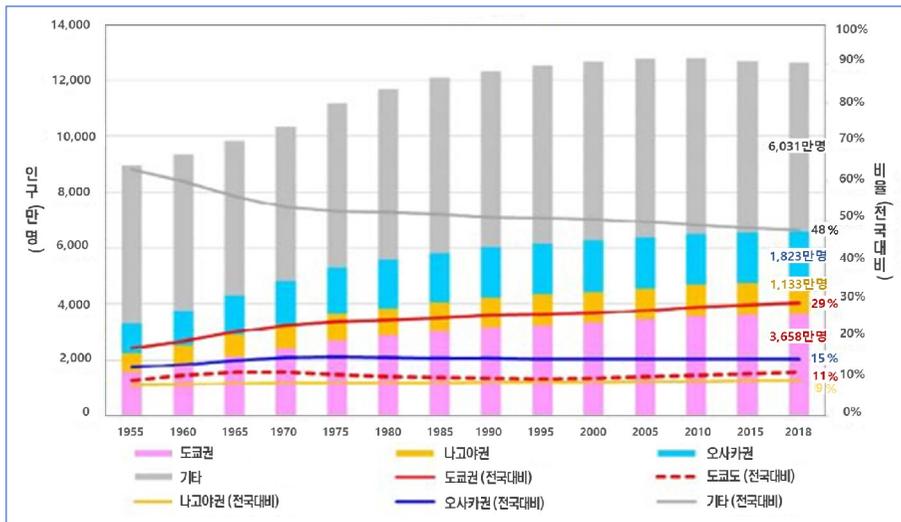
01 서론	05
02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 대책	09
03 일본의 기업 본사 집중 원인과 최근 코로나19 이후 정책 동향	17
0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5
부록	29

01 서론

■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일극 집중 심각

- 권역별 인구 추이를 보면,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을 포함하는 3대 대도시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함(그림 1) 참조
 - 도쿄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국인구의 약 29%(약 3,658만 명)¹⁾
 - 나고야권과 오사카권의 인구는 2000년대 전반부터 변동이 거의 없음
 - 도시권별 출생자 중 동일 도시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대도시권에서 높게 나타나고, 도쿄권은 특히 90% 이상을 보여 도쿄권에서 타지역으로의 전출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8)

그림 1 권역별 인구 추이(1955~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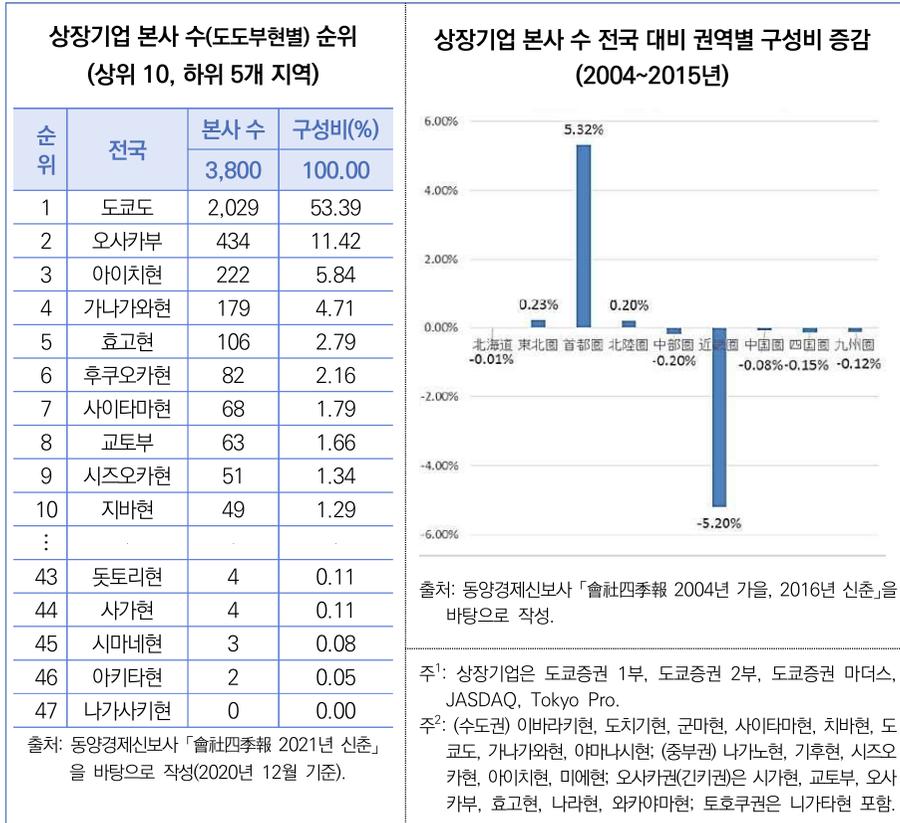
주1): 도쿄권(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나고야권(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오사카권(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3대 도시권: 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 지방권: 3대 도시권 이외의 지역.

주2): 1955년부터 5년마다 데이터는 총무성 '국세조사', 2018년 데이터는 총무성 '인구추계'를 기초로 국토정책국 작성. 출처: 국토정책국(國土政策局).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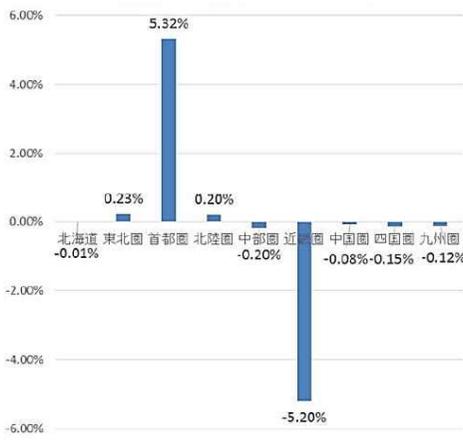
1)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에 도쿄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덕분에 인구 집중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2021년 1월 29일 검색).

-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 심화(〈그림 2〉 참조)
 - 2020년 12월 기준,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전국 대비 상장기업 본사수의 구성비는 2004~2015년 사이에 수도권은 5% 이상 증가

그림 2 상장기업 본사 수 지역별 순위 및 비중



상장기업 본사 수 전국 대비 권역별 구성비 증감
(2004~2015년)



출처: 동양경제신보사 「**會社四季報** 2004년 가을, 2016년 신춘」을 바탕으로 작성.

주¹: 상장기업은 도쿄증권 1부, 도쿄증권 2부, 도쿄증권 마더스, JASDAQ, Tokyo Pro.
 주²: (수도권)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마나시현; (중부권)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오사카권(간키권))은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토호쿠권은 니가타현 포함.

- 도쿄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는 대학 입지와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고용시스템(평생고용 선호, 직무 및 지역 한정 채용 비선호) 등이 지적됨
- 일본은 기업 본사의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창생정책 추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본사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실시, 그러나 전반적으로 도쿄 일극 집중은 크게 완화되지 않는 상황임

- 일본은 그간 도쿄권 집중 억제를 위해 공장 및 사업소의 지방 이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일부 이전 사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함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대기업들은 대부분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을 수립하고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본사 재배치 혹은 본사 일부 이전 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현 사례는 많지 않았음
 - ※ 업무연속성계획(BCP)은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를 말함(산업통상자원부 2020).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지진 발생 시 도쿄 일극 집중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업 및 인구의 집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최근 일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성 오피스 도입을 촉진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본사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²⁾

- 일본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본사 재배치 의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업 본사 분산의 계기를 맞고 있음
 - 국토교통성은 도쿄 일극 집중의 요인 등에 대해 더욱 다각도의 관점에서 분석·논의하기 위해 「기업 등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 진행

■ 이 연구는 일본의 기업 본사의 도쿄권 집중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 이전 대책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미국에서도 원격근무·재택근무의 확산과 고급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위성오피스 설치 등 기업 활동의 분산 경향 확산 중(예, 아마존Amazon의 시애틀 인근 벨뷰Bellevue시의 오피스 확장 사례).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의 75%가 재택근무 시작, 약 20%의 노동력이 위기 이후에도 풀타임으로 원격근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1/3은 파트타임으로 원격근무 실시 예상(Florida 2020).

02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 대책

1)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이전 대책

■ 지방창생은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추진됨

-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사무국과 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에서 지방창생 추진을 위한 시책 수행
 -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지방창생에 관한 법률·예산·제도의 운용 담당
 - 내각관방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은 정책의 기획·입안, 총합 조정
- 이에 따라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4개의 기본목표와 2개의 횡단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진행³⁾(〈표 1〉 참조)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 지방창생전략의 핵심과제로 2015년부터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대책 수립 및 추진

- 2015년에 '지역재생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재생계획'에서 지정하는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특례 조치 신설(〈부표 1〉 참조)
 - 도쿄권(도쿄 23구 및 주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일부), 추부권 중심부(나고야시 특정 구역), 킨키권 중심부(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일부)는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서 제외
- 본사 기능을 이전하고 확충하는 사업자는 각 현(県)에 '지방 활력 향상지역 등 특정업무시설 정비계획' 신청의 인정에 따라 과세특례 등의 우대조치 활용 가능

3)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표 1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시책 종합

항목	내용	
기본목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 중견·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지역 상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 운영 전문가 인재 (매칭)사업
기본목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 정보 지방창생 텔레워크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거점강화세제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 도쿄권 대학의 지방 위성 캠퍼스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의 지방 정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창생 인턴십 관계인구 창출·확대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고교생의 지역유학 추진을 위한 고교 매력화 지원사업 지방과 도쿄권 대학생 대류 촉진사업 기업 판 고향 납세 고향구인·이주지원금·창업지원금
기본목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임신·출산·육아의 끊임없는 지원 	
기본목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관리 활동 추진 중심 시가지 활성화 작은 거점 형성 지역 활성화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재생 계단식 논 지역 진흥 관광지역만들기법인(DMO)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횡단적 목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창생 인재 지원 제도 지방공공단체 등에 인재 알선 및 파견 사업에 관한 원스톱 창구 지방창생 칼리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창생 컨시어지(안내) 지역 활성화 전도사 평생 활약의 거리
횡단적 목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창생미래기술지원창구 미래 기술 사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창생 SDGs, 환경미래도시 구상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창생관계교부금제도 지역재생제도 국가전략특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특구제도 구조개혁특구제도

출처: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홈페이지.

■ 과세특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거점강화세제⁴⁾' 도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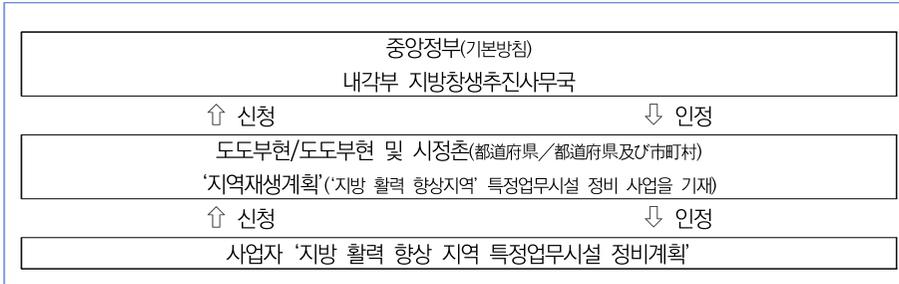
- 지방거점강화세제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방거점강화세제와 더불어 기업의 지방 거점 강화를 추진하는 특례조치로서 고용촉진 세제 운영(2020년도 말 적용 기한, 현재 2022년도 말까지 연장)
-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특정 업무 시설⁵⁾)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역재생 계획으로 규정,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오피스 감세 등의 세제 감면과 채무보증, 과세특례 등의 우대조치 적용

4) 2021년도 말 적용 기한, 현재 2022년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요건도 완화함.

5) 본사 기능이란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을 지칭.

- 지방거점강화세제는 이전형·확충형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도쿄 23구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본사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는 유형(이전형 사업)과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 기능을 확장하는 유형(확충형 사업)으로 나뉘며 세제 혜택이 상이
 - 이전 대상지는 도쿄 및 수도권 정비 대상지역(도쿄 인근)을 제외한 지방으로 한정

그림 3 사업계획 및 승인 절차



출처: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홈페이지.

■ 지방거점강화세제는 본사 이전형·확충형 사업의 특례조치로 채무보증, 국세 및 지방세의 감세 조치를 시행하며, 요건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세제개편 진행

-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업무
 - 인정사업자가 실시하는 특정 업무 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자금 차입 또는 사채발행과 관련된 채무보증
- 이전형과 확충형 사업의 오피스 감세(국세), 고용촉진세제, 지방세 감세 조치는 <표 2>와 같음
- 지방거점강화세제와 더불어, 이와 연동한 세제 우대 정책으로 공급사슬(supply-chain)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마련
 - 공장 신·증설 및 공장과 함께 사무소나 연구소를 신·증설할 때 지방거점강화세제 및 고용촉진세제와 연계하여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지방에서도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실시

- 지역별로 취득세·사업소세 등 국세 외에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 나가노현(長野県)은 도쿄도 인근에 위치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 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
 -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인세 경감 조치 시행, 도야마현·이시카와현(90% 경감),

군마현·가가와현(1차년도 50%, 2차년도 25%, 3차년도 12.5% 경감) 등 제시

- 이외에도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저리 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표 2 지방거점강화세제 내용(2020년도 세제 개정 반영)

항목	이전형	확충형
개념	본사를 도쿄 23구로부터 지방 이전 경우	지방 소재 기업의 본사 기능을 확충하는 경우
국세 (법인세·소득세) : 오피스 감세	-사무실 관련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25% 또는 세액공제 7%(신설) *계획 인정이 2017년도인 경우 4%(2020년 세제 개정)	- 사무실 관련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15%, 세액공제 4%(이전을 수반 시 특별상각 25%, 세액공제 7%) * 지방 활력 향상지역 특정시설 정비계획을 2017년도 인정받은 경우, 세액공제 2% (이전을 수반 시 세액공제 4%)
고용촉진 세제 ¹⁾	-신규 고용 종업원 수 × 최대 60만 엔 + 30만 엔 세액 공제 * 30만 엔은 고용 유지에 의해 최대 3년간 적용 **2020년 세제 개정에 따라 종전 세액 공제 확대 ① 증가 고용자 1인당 최대 80만 엔 세액 공제 확대, ②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① 중 30만 엔은 최대 3년간 계속(신설), ③ 세제 ②는 법인 전체의 고용 증가가 없어도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자에게도 적용(신설)	-신규 고용 종업원 수 × 최대 60만 엔 세액 공제 **2020년 세제 개정에 따라 종전 세액 공제 확대 ① 증가 고용자 1인당 50만 엔 세액 공제 확대(종래의 40만 엔 + 지방 거점분은 10만 엔 추가), ② 법인 전체 고용증가를 10% 미만인 경우에도 1인당 20만 엔을 세액공제(신설)
지방세 ²⁾ : 법인사무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사업세) 3년간 과세 면제 -(부동산취득세) 과세 면제 -(고정자산세) 시정촌(市町村)세분은 이전 대상 시정촌 규정, 현(県)세분은 3년간 과세 면제	-(부동산취득세) 세율을 현행 세율의 1/10로 경감 -(고정자산세) 시정촌세분 확충처의 시정촌 규정, 현세분은 3년간 경감
요건 완화사항 (1)	- 지원제외지역인 도쿄권, 킨키권, 추부권 중심부에서 킨키권과 추부권의 중심부는 지원대상으로 추가 * 오피스 감세는 타지역과 동일비율 적용, 고용촉진세제는 최대 80만엔/명 세제 공제	-
요건 완화사항 (2)	- 기존에는 본사기능(사무소·연구소·연수소)으로 지원대상시설을 한정했으나, 공장 내 연구 개발시설도 지원대상시설로 포함	

주¹⁾: 적용요건 ① 이전·확충시설 고용자 수 2인 이상 증가, ② 법인 고용 증가율 × 20% 이상 증가, ③ 이전형은 5% 이상, 확충형은 8%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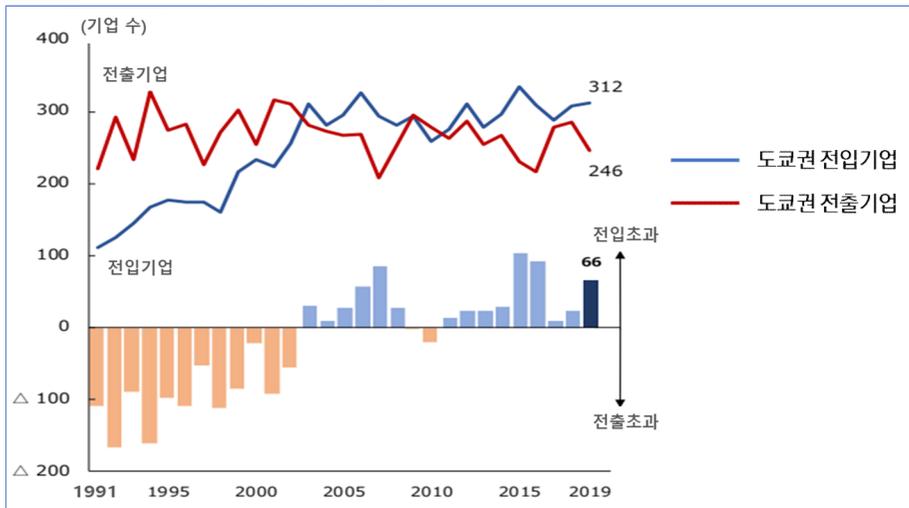
주²⁾: 인정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불균일 과세 혹은 과세 면제에 따른 우대조치(최대 3년간이며, 감수액에 대해 지방 교부세 보전, 과세 면제는 2030년부터 이전형 사업만 제도화).

출처: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2020b; 내각부 2018 내용 정리.

■ 지방거점강화세제 및 고용촉진세제의 유효성 여부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의 수치목표로서 2020년까지 5년간 지방 거점 강화 사업 건수 7,500개, 4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으며 현재 2022년까지 연장 시행 중임
- 도쿄권으로의 기업(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그림 4〉 참조)
 - 1991~20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진출 초과였으나, 20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본사 전입 초과 지속
 - 20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전국에 2,011개인데, 이 중에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그림 4 도쿄권으로의 기업(본사) 이전 동향



출처: 일본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0, 3의 그림을 저자 번역.

- 지방거점강화세제의 지원 실적은 그리 크지 않음(〈표 3〉 참조)
 - 세제 지원 절차상* 2015년도에 정비계획을 인정받은 사업자 대부분이 당해 연도 내에 특정 업무 시설의 건설 및 취득 등을 완료하기 어려움
 - *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지방에서 본사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활용한 지역재생계획을 승인한 이후, 도도부현이 사업자의 '지방 활력 향상지역 등 특정 업무 시설 정비계획'을 인정하도록 절차 확립
 -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오피스 감세 혜택을 단념하는 사례도 발생
- 그러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추가·확대 등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저변 확대

전망,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인정 및 이에 따른 세제 적용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참조)

-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2020a)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5개 도
부현(道府県)의 52개 정비계획이 승인됐는데, 주요 사업으로 이전형 사업 391건, 확충형
사업 1,533건, 고용 창출 1만 8,788명의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표 3 오피스 감세 및 고용촉진세제 적용 현황(2015~2019년)

(단위 : 건수, 천 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오피스 감세 건수	4	20	31	24	40
취득세감액(국세만)	300,897	137,268	280,514	197,049	517,799
세액공제액(국세만)	79,636	1,550,067	1,466,314	680,278	895,747
고용촉진세제 건수	7	5	11	11	7
세액공제액(국세만)	3,778	4,891	49,090	23,717	51,396

출처: 일본 재무성 '조세특별조치 적용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국회 제출용) 내용 재정리.

표 4 지역재생계획 인정 현황(지방 활력 향상지역 등 특정업무시설 정비계획 기재, 2015~2018년)

구분 (인정날짜)	도도부현 (都道府県)	내용
제33회 (2015.10.2.)	21개 도부현 24개 계획	홋카이도, 미야기현, 치바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기후현(4개 계획), 미에현, 오사카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도쿠시마현, 카가와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제34회 (2015.11.27.)	12개 부현 15개 계획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이바라키현, 니가타현(3개 계획),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2개 계획), 아이치현, 교토부, 고치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제36회 (2016.3.15.)	11개 현 11개 계획	아키타현, 후쿠시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시즈오카현, 시가현, 나라현, 에히메현, 사가현, 가고시마현
제37회 (2016.6.17.)	1개 현 1개 계획	이와테현
제50회 (2018.11.9.)	1개 현 1개 계획	오кина와현
사업 합계 (2015~2018년)	45개 도부현 52개 계획	(이전형 사업) 391건, (확충형 사업) 1,533건, (고용 창출) 1만 8,788명

주: 미인정 지자체...2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출처: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 2020a 내용 재정리.

표 5 지방거점강화세제 적용 기업사례

- YKK 그룹은 지방거점강화세제 시행 후 최초 우대세제 적용을 받은 기업 중 하나로, 인사·경리·재무 등 관리 부문의 230명의 사원을 이전할 계획 진행
 - 토야마현은 창업자의 출신지로 70여 년간 생산거점을 두고 연구개발과 기술이 집적하여 이전 결정
 - 도쿄에 집중된 분사 기능을 분산하고 재해 시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로 대비하고, 호쿠리쿠 신칸센의 개통으로 도쿄와 토야마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 긍정적 결정
 - YKK 경영기획실은 '수도 직하형 지진의 리스크 분산, 생산거점의 경쟁력 강화, 지방창생의 관점 등에서 분사 기능을 이전, 시설의 일부는 시민에게 개방해서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라는 의견
- 혼다 통신공업(케넥터 제조)은 나가노현으로 연구 부문 이전 결정, 아즈미노시(安曇野市)의 아즈미노 공장에서 신규고용 4명 예정
- 토네지(トネジ)는 츠쿠바 공장 설립 후 분사 기능을 츠쿠바시로 이전, 재해 리스크에 대비, 도쿄 올림픽, 리니어 신칸센 등에 의한 수요 증가를 분사 이전의 요인으로 고려
- 대부분의 이전을 결정한 기업들(혼다 통신공업, 히타치 마크셀, 비레·재팬(ブイレージャパン) 등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리스크 회피와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이전 결정

출처: 아마토총합연구소(大和総合研究所) 2020; YKK AP 토네지(トネジ) 홈페이지 내용 정리.

2) 지사(知事)⁶⁾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

■ 지방 12개 현(県)의 행정 단체장은 지방의 새로운 정책을 정리하고 국가에 제안하는 상향식의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 2010년 1월 후쿠이현의 제창에 따라 설립하여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후를 주제로 현 단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인력교류 등의 연계사업 실시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고향희망지수 연구 프로젝트, 지방의 라이프스타일 제안, 지방 이주 및 교류 촉진, 도시 고령자 수용 프로젝트 등 총 25개 공동 프로젝트 수행
 - 특산물 상호 판매, 학교급식 교류, 상공회의소 간 네트워크 설립, 인사 교류(직원 상호파견), 교육 여행 교류, 고향 문학 교류, 고향 창생 공동사업 등 연계사업 추진
- 2021년 3월 해산 때까지 10여 년의 활동을 통해 로컬 지식을 결집하고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으로의 분산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표 6〉 참조)
 - 지방거점강화세제 창설, 도쿄대학 정원 억제 및 지방 국립대학의 정원 증가 등을 실현
-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예로써, 광역 지역의 명목적

6) 지사(知事)는 도도부현(都道府県) 행정구역의 장을 말함. 일본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쿄도(都), 홋카이도(道), 교토부, 오사카부(府), 그리고 43개의 현(県)이 있음.

제휴 차원에서 벗어나 12개 현이 구제화된 초광역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

그림 5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 참가 현(県)



출처: 후쿠이현(福井県) 홈페이지, 2021. <https://www.pref.fukui.lg.jp/doc/seiki/furusatotijnetwork.html> (2021년 7월 15일 검색).

표 6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정책 제안	주요 성과
2013년 지방대학의 정원 증가 촉구	2020년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종합전략 개정에 따라 지방 국립대 정원 증가 허용
2014년 대도시와 지방의 법인세율 차등을 통해 지방으로의 기업 분산 촉진제도 창설 촉구	2015년 지방거점강화세제 창설
2014년 R&D기관, 연구기관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 촉구	2016년 정부 관계기관 이전 기본방침 결정
2014년 고향납세제도의 공제액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도모	2015년 고향납세제도의 납세액 약 2배 확충 및 원스톱 특례제도 창설
2016년 지방거점강화세제 지속과 함께 3대 도시권 ¹⁾ 에서의 이전 시 우대제도 적용	2017년 지방거점강화세제 연장, 오피스 감세, 고용촉진세제 확충
2016년 대도시권 대학의 신설 및 정원 억제, 지방대학의 정원 확대 촉구	2018년 지방대학진흥법 통과로 도쿄 23구 소재 대학의 정원 증가를 원칙적으로 10년간 제한
2019년 지방거점강화세제 지속과 함께 3대 도시권에서의 이전을 위한 효과적인 우대제도 강구	2020년 지방거점강화세제 연장 ²⁾ , 고용촉진세제 적용요건 일부(신규 고용 증가 수 등) 완화, 세액공제 확충

주¹⁾: (3대 도시권) 도쿄권·나고야권·오사카권.

주²⁾: 적용 기한을 2022년도 말까지 연장.

출처: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 지사 네트워크(自立と分散で日本を変えるふるさと知事ネットワーク) 2021.

03 일본의 기업 본사 집중 원인과 최근 코로나19 이후 정책 동향

- 일본 국토교통성 주재 ‘기업의 도쿄권 집중 심화에 따른 지방 이전 대책’ 논의
 - 지방창생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쿄권의 과도한 집중 경향이 완화되지 않자 도쿄 일극 집중의 요인 등에 대해 보다 다각도의 관점에서 분석·논의하기 위해 ‘기업 등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 설치⁷⁾
 - 향후 국토교통성 정책 개발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 6일 제1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간담회 개최 및 6차 정리자료 배포
 - 수도 직하 지진(도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진) 발생 확률 증가 우려, 최근 코로나19 재해에 따라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사례 존재, 기업 활동이나 근로방식의 다변화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도쿄 집중요인 및 분산 가능성을 논의
 - 한편 세계도시인 도쿄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할 때 도쿄의 일극 집중이 과도한 것인지, 도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집적 경제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도쿄의 성장 방향성도 고민
- 도쿄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의 입지 및 경제력 집중, 재계·업계 단체 활동 편의,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 지적⁸⁾
 - 수학·취업 등을 위해 20대 전·후 층이 도쿄에 유입
 - 대학 정원 및 학생 수가 도쿄권에 집중되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직하는 비율이 높음
 - 상장기업의 본사는 도쿄도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전히 증가 경향을 보임
 - 외국계 기업 및 벤처기업도 도쿄도에 집중

7) 간담회에 참가한 위원(간담회 역할,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음. 마스다 히로야(좌장,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지방소멸론 저자), 야기이케 레이코(위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매니저&시니어 파트너), 오쿠보 도시히로(위원,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제학부 교수), 카타야마 겐스케(위원, 나가사키대학 대학원 수산·환경과학 종합연구과 환경과학영역 준교수), 고이케 시로(위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구조연구부장), 다카미 구히로(위원,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원수지구 부주임연구원), 나가무라 아미에(위원, 리크루트웍스연구소 주임연구원), 마루타니 히로아키(위원, 도호쿠대학 재해과학국제연구소 교수), 무리야마 아키토(위원, 도쿄대학 공학계연구과 도시공학전공 준교수) (일본 국토교통성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 홈페이지).

8) 일본 국토교통성 ‘기업 등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2021.1.29.)’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 도쿄권은 지방과 비교해 일반 및 단시간 노동자 모두에서 명목 급여의 수준이 높음
- 매력·편리성, 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도쿄로 유입
 - 학업 또는 취직 이외에 '도쿄에서 살고 싶었다', '살던 지역이나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싶다' 등의 이유로 도쿄를 선호하는 사람 다수
 -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 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에 대해 언급
-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환경
 - 일본은 평생 고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 여타 유럽 국가와 비교해 근속 연수가 길고 정년까지 동일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향
 - 신규 대졸자 채용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전국 단위 채용)
 - 육아나 자녀교육의 이유로 도쿄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세대도 적지 않음
- 또한 젊은 여성의 커리어 지향과 여성 고용환경 실태의 괴리로 인해 지방에서 여성인력 유출 가능성 및 낮은 여성의 관리직 비율 등의 성별 격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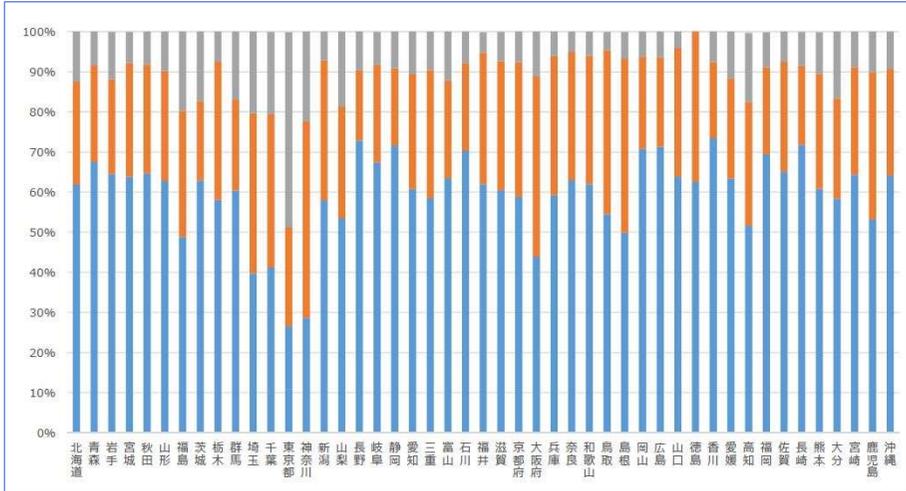
■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새로운 생활양식에 관한 관심 증가로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 증가

-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 예'(2020.5.4.)에서 일하는 방법의 새로운 스타일, 가령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rotation) 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생활양식 제시
- 내각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아래에서의 생활의식·행동의 변화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특히 20~30대에서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도쿄도 23구에 거주하는 20대의 이주 관심이 특히 높음
- 텔레워크(telework)⁹⁾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 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 도쿄 도심 5구의 오피스 수요는 2023년까지 5% 가량 상승 전망, 전체 종업원의 10%가 텔레워크를 지속할 경우 오피스 공실률은 15%정도까지 상승 예측
 -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 및 위기 시 백업 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텔레워크나 원격근무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이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 다수(〈그림 6〉참조)
 -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18일~10월 8일 기간에 진행

9) 텔레워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정의.

- 응답자 샘플은 18~65세의 4,376명으로 구성

그림 6 텔레워크·원격근무 정착 시 희망 거주지역



주1: 파란색(지방), 주황색(도쿄 이외 도시), 회색(도쿄)

주2: (그래프 하단 도시 이름순서)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도, 카나가와, 니이가타, 야마나시, 나가노,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토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시가,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 나라, 와카야마, 토토리, 시마네,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토쿠시마, 카가와, 에히메, 코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기업 등 도쿄 일국집중에 관한 간담회(20.12.14.)'.

■ 기업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 재배치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¹⁰⁾

- 도쿄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2,024개사를 대상(유효 응답 389개사)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0년 8월 27일~9월 23일
 - 텔레워크의 활용, 본사 이전 의향 및 희망지, 기업이전 지원수단, 인사제도 등에 대해 질문
- 텔레워크의 현재 활용 정도와 향후 이용방침
 - 응답 기업의 85%는 텔레워크를 도입했는데, 이 중 2020년 1월 이후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조치로 판단됨
 - 2019년 이전에는 23%의 기업이 텔레워크를 실시했으나, 2020년 8월에는 81%의 기업이 텔레워크를 실시했고 대기업(종업원 1천 명 이상)의 이용도가 높았음
 - 코로나19 종식을 염두에 둔 향후의 텔레워크 이용방침에 관한 질문에서는 확대가 18%, 유지가 53%로, 확대·유지가 70%를 차지해 텔레워크가 보편적인 업무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10) '기업 등 도쿄 일국집중에 관한 간담회(20.11.12.)' 제4회 수록내용 정리.

- 텔레워크 이용 비율은 정보통신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제조업에서 높았고, 이용 부서로는 정보시스템, 기획, 영업, 홍보, 연구·개발 부문이 높았음
-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을 위해서는 텔레워크가 향후 업무방식으로 정착하는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텔레워크의 보급으로 거주지 프리 채용과 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지를 강조하는 기업이 등장하는 등 지방의 인력 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본사 재배치 의향, 이전 희망지 및 지원 요구사항

- 본사 재배치(전면 이전, 일부 이전, 축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97개사로 전체 응답의 26%를 차지하며, 2020년에 본사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기업이 전체의 14%, 본사 사업소의 축소를 검토하는 비율도 증가
- 본사 기능의 재배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26%는 이전 시 인재 채용의 어려움 예상
- 본사의 이전이나 축소를 고려하는 기업은 텔레워크 이용도가 높은 기업들이었는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물품임대업, 도·소매업, 제조업 비율이 높음
- 본사의 부문·부서 가운데 연구·개발, 영업부문의 재배치 고려가 일부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본사의 재배치 결정으로 기대하는 이점은 근로환경의 개선, 임대료 삭감 및 부동산 매각의 비율이 높음
- 이전 대상지(복수응답)로서는 도쿄 23구가 73%, 도쿄 23구 이외 도쿄도 내 17%, 수도권(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 등) 21%, 수도권 이외 지방 14%로, 본사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업은 주로 도쿄 주변지역을 선호
- 기업은 이전 대상지에 오피스 면적의 확보나 저렴한 임대료 조건을 희망, 또한 공공 지원으로 오피스 이전 비용에 관한 보조금 지원, 세제 우대를 희망
- 정보통신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분야는 텔레워크를 정규 업무방식의 일부로 고려할 경우 본사의 오피스 면적 축소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사의 위성오피스 인프라 정비 및 공유 오피스 이용에 관한 관심도 증가

- 수도권 내 본사 재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본사의 지방 이전을 발표한 사례도 점차 증가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계기로 기업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이 화제가 되고 있다”(日經 ESG 2020)
- 2020년 9월, 인재 파견 업체인 파소나 그룹이 코로나19 대책과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하나로, 도쿄 시내에서 효고현으로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을 발표(〈표 7〉 참조)
- 루피시아(다과류 제조판매, 비상장기업)는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현지에 식품가공공장 소재
- 모리타약품공업(제약, 비상장기업)은 히로시마현으로 본사 기능 이전, 창업지역이며 현지

- 에 제조공장 소재
- 인포메이션 디벨롭먼트(정보통신, 상장기업)는 본사기능 일부를 돗토리현으로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용 거점 개설
- 조반 흥산(常盤興産)(오락, 상장기업)은 도쿄의 본사를 폐지하고 후쿠시마현으로 이전, 현지 에 레저시설(리조트 등) 소재

표 7 (주)파소나그룹(パソナグループ) 사례

- 종업원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업무방식'의 실현과 그룹 전체의 위기 대응 및 리스크 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쿄·치요다구의 그룹 본사 기능을 효고현(兵庫県) 아와지 섬(淡路島)의 거점에 이전 계획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9월~2023년도 말까지 순차적 이전
이전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연속성계획(BCP) 관점에서 도쿄에 본사 기능이 집중하는 것을 리스크로 인식, 본사 기능을 2개의 거점으로 분산 • 원격업무를 활용한 다양한 근로방식과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 • 거점 분산에 의해 오피스 임대료 1/10 수준으로 절감 가능
대상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지방창생사업 실시 중, 섬 내에 복수의 거점과 오피스 기능 보유 • 고베와 오사카까지 30분~1시간 거리이고, 4개의 공항과 5개의 세계유산이 근접하여 세계적으로도 지역의 매력이 있다고 판단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전체 본사기능에 속한 사원 1,800여 명 중 1,200여 명 이전 대상
이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기능 업무/인사(채용, 교육, 급여 계산 등), 홍보, 총무, 재무 경리, 신규 사업 개발, IT/DX(Digital transformation), 글로벌, 경영 기획 등 • DX·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센터/자사를 시작으로 고객 기업의 인사이드세일즈, 마케팅 자동화 툴을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시를 활용한 콘택트 센터, 급여 계산의 클라우드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에 의한 업무 자동화 등
업무 변화·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등록 업무는 대상 지역의 인구 규모가 중요하나 현재 온라인에서도 가능 • 총무, 재무 경리, 경영 기획 등의 본사 기능을 도쿄와 아와지섬의 2곳으로 분산 • 아와지섬은 통신 및 온라인 통화 인프라 개선 필요
취업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이전지로 거주하기도 하고, 2곳의 거점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음 • 가족 간호 등의 사유로 지역한정제도가 실시, 도쿄에서 근무 희망 시 대응 가능(직종 전환은 발생 가능) • 초기에 주 또는 월 단위의 워케이션(workation, work+vacation) 형태로 거주, 학교, 의료서비스 등을 점검해보는 방식도 유효
사원의 생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의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기업은 사택과 회사 간 버스 운행, 사원의 교통비 보조를 위해 자동차 렌트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검토 • 탁아소 개설, 온라인 진료 및 교육 등에 대해 그룹차원이나 자사 직원이 대응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와지섬의 거점에는 외부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 시설'을 건립해 새로운 근로방식 체험 장소 제공 계획 • 아와지섬에는 음식·숙박·레저시설·극장 등 섬 주민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이 모이는 시설을 개발 중

출처: 파소나그룹 홈페이지 내용 재정리.

■ 최근의 환경변화는 도쿄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각각의 평가 필요¹¹⁾

- 향후 도쿄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요인
 -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 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를 더욱 불러올 가능성) 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 도쿄권 거주자의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할 때까지 증가
- 향후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
 -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 텔레워크의 보급, 도쿄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 (인사제도 검토) 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가족과 떨어져 원거리 발령지에서 근무)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 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의 의식 전환) 도쿄도의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도쿄권은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풀타임 고용자의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 도쿄 일극 시정을 위한 방향성 제안

- 일본 지방창생본부는 기업의 이전 가능 동향에 주목하여 지방거점강화세제를 2022년까지 연장, 본사 지방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제도 활용 사례도 증가
- 지방창생정책 기본목표 2 '지방과의 관계 구축과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방창생 텔레워크(전직 없는 이주; 도쿄권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하며 지방으로 이주해 업무 수행) 적극 추진
 -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은 지방창생 텔레워크에 대한 지자체·기업·사람들의 이해와 호응을 높이고, 상담해주는 창구(<https://www.chisou.go.jp/chitele/>) 개설

11) '기업 등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20.12.14.) 제5회 수록내용 정리.

- 지방창업 텔레워크에 다양한 단계가 있고, 규모나 업종에 따라 상황의 차이가 있으므로 세심한 지원, 가이드라인 정비 등 제도 정비 및 정보 제공의 일원화 시행 추구
- 일본 국토교통성도 민간기업의 지방으로 본사 이전 목적, 동향, 애로사항을 심층조사해 대안 마련 중
 - 리스크 회피를 위한 도쿄 도심의 본사 기능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연속성 계획(BCP)의 작성 및 백업 기능의 정비를 지원
 - 텔레워크 진전에 따른 직장과의 분리, 지방 이주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행정·민간 모두 업무의 디지털화 추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인식
 - 유연한 고용 형태와 재택근무를 전제로 거주지를 가리지 않는 기업의 채용 인사제도 도입
 - 텔레워크 거주지가 되는 지방이나 도쿄 교외의 일·생활 환경의 발달 도모
 - 도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학점교류 제도, 각 지방 대학의 강점을 살린 경쟁력 강화, 산학연계 등을 통한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 창출
 - 도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 완화방안 강구(지방에 생산성이 높은 우량 벤처기업 창출, 농림수산업·관광업 등 지방 기초산업 생산성 향상 등), 일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텔레워크를 활용한 부업 및 겸업 실행 가능성
 - 지방 생활의 향상이 문화나 자연환경의 보전·활용도 있겠지만, 도시적 요소의 마련도 중요; 스마트시티·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을 시가지에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
-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기업 이전이 아니라 텔레워크를 활용한 기업 분할이나 지방의 네트워크 고용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쿄의 문제(재해 리스크나 과밀에 의한 통근 문제 등)를 해결하고 도쿄와 지방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안 제안
 - 본사를 분할해도 기업의 기획이나 영업의 중심이 도쿄에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도쿄의 국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고 도쿄의 과밀로 인한 약점을 보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0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 평가

- 일본은 최근에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초미의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본사 재배치 의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업 본사 분산의 계기를 맞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과연 도쿄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임
 -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지원 대책이 이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창출 가능
 -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개혁,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최근에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그러나 과연 도쿄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이 높고, 특히 대기업일 수록 고객, 직원, 거래관계 등의 고려 때문에 쉽게 재배치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
 - 간담회 조사 결과, 텔레워크의 확대로 도쿄 일극 집중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본사 이전에 대해 도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은 적어 본사 집중의 해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
 - “최근의 기업의 지방 이전 동향이 도쿄 집중의 동향을 확 바꿀만한 무브먼트(movement) 까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日經ESG 2020)

2) 정책적 시사점

-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 관점도 중시할 필요
 - 일본은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 리스크 회피를 위한 도쿄 도심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시키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이란 관점을 중시(이외에 복수본사제 등)

-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의 디지털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 과제
 -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 필요

■ 지역에 업무 활동을 위한 공간(코워킹 스페이스 등)¹²⁾,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關係人口)¹³⁾의 확대 촉진

- 일본은 텔레워크 보급,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으로 관계인구의 확대를 강조
 - 도쿄 태생의 도쿄 거주자 증가, 대학 졸업 후 도쿄 정착 등은 도쿄 일극 집중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텔레워크, 대학 교류 및 2거점거주 등을 통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지방과 교류를 만드는 전략 추구

■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에서 보듯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의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됨

-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재한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는 국민과 기업의 인식조사를 통해 기업 활동 및 근로방식, 생활 가치관 변화 등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여 정책 개발의 토대 마련
 -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련된 미시적 조사와 정보 축적 필요

12) 정수희·허동숙.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 no.3: 292-311 참조.

13) 관계인구는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를 지칭(차미숙 2020).

참고문헌

정수희·허동숙. 2020. 지역의 창조적 커뮤니티로서 코워킹 스페이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 no.3: 292-311.

차미숙. 2020. 인구감소 시대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방향 -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2020~2024). 국토이슈리포트 제22호. 세종: 국토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20. 감염병 발생 시 기업의 업무연속성 계획 가이드라인(2020.04.).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Florida, R. 2020. The Uncertain Future of Corporate HQs, *Harvard Business Review, Economics & Society*. September 18, <https://hbr.org/2020/09/the-uncertain-future-of-corporate-hqs> (2021년 7월 16일 검색).

[일본 자료]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研究所). 2018. 2016년 사회보장 인구문제 기본조사-제8차 인구 이동조사보고서(2016年 社會保障 人口問題 基本調査 第8次 人口移動調査報告書).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国土交通省国土政策局). 2019.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 제1회(2019.12.6.).

_____. 2020a.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 제2회(2020.7.10.).

_____. 2020b.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 제3회(2020.9.9.).

_____. 2020c.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 제4회(2020.11.12.).

_____. 2020d.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 제5회(2020.12.14.).

_____. 2021.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 제 정리(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第とりまとめ)(2021.1.29.).

국토정책국(国土政策局). 각 연도. 권역별 인구추이 1955~2018(圏域別 人口推移, 1955~2018).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2020a. 地方における本 社機能の強化を行う事業者への特例を活用した地域再生計画の認定結果(지방에 있어 본사기능 강화를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활용한 지역재생계획 인정 결과)(2020.11.5.).

_____. 2020b. 지방거점강화세제 안내(地方據點強化税制 案内).

내각부(内閣府). 2018. 2018년 세계개정요향결과참고자료(2018年度税制改正要綱結果參考資料)(2018.12.).

닛케이ESG(日経ESG). 2020.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은 늘어날까(本社機能の地方移転は増えるのか) (2020.11.20.).

동양경제신보사(東洋經濟新報社). 각 연도(2004, 2016, 2020). 회사 사계보(會社四季報).

아마토총합연구소(大和総合研究所). 2020.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 '지방거점강화세제에 대하여 - 마을·사람·일 자리창생본부 지방창생에 관한 도도부현·지정도시 담당 과장 설명회 자료22, 지방거점강화세제에 대하여 2020.1.15.)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地方拠点強化税制について -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地方創生に関する都道府県・指定都市担当課長説明会資料22, 地方拠点強化税制について2020.1.15.).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2021. 도쿄로부터의 전출 40만명, 코로나에 일극 집중 변화(東京からの転出40万人、コロナで一極集中に変化) (2021.1.29.).

일본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2020. 2019년 전국 본사이전동향조사(全国「本社移転」動向調査2019年) (2020.6.2.) <https://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200602.pdf> (2021년 7월 15일 검색).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 지사 네트워크(自立と分散で日本を変えるふるさと知事ネットワーク). 2021.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 지사 네트워크 활동록, 지금까지의 활동과 성과(2021.3.).

재무성(財務省). 각 연도 조세특별조치 적용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 2015년도~2020년도(租税特別措置の適用実態調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書, 適用実態調査, 平成27年度~平成30年度国会提出).

[일본 홈페이지 자료]

YKK AP. <https://www.ykkap.co.jp/> (2021년 7월 6일 검색).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기업 등의 도쿄 일극집중에 관한 간담회(企業等の東京一極集中に関する懇談会)' https://www.mlit.go.jp/kokudoseisaku/kokudoseisaku_tk3_000107.html (2021년 5월 31일 검색).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사무국(内閣官房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事務局) <https://www.chisou.go.jp/sousei/> (2021년 5월 31일 검색).

토네지(トーンジ). <https://www.toneji.co.jp/> (2021년 7월 6일 검색).

파소나그룹(パソナグループ). <https://www.pasonagroup.co.jp/> (2021년 7월 6일 검색).

후쿠이현(福井県). 2021. <https://www.pref.fukui.lg.jp/doc/seiki/furusatotijinetwork.html> (2021년 7월 15일 검색).

[일본 법령]

일본 '지역재생법'. e-GOV 법령검색. (2021년 4월 30일 검색).

[부록]

부표 1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관한 법적 근거

법령	설명
<p>「지역재생법」 제5조 제4호</p> <p>「지역재생법」 제5조 제4호</p>	<p>「지역재생법」 (2005년 법률 제24호), (시행일 2021년 4월1일), (2021년 법률 제52호에 따라 개정)</p> <p>제3장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등(지역재생계획 인정)</p> <p>제5조 지방공공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역재생기본방침에 의거하여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역재생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4.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p> <p>(4) 지역의 특정 정책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전 호의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외)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다음 항 및 제9항에서 "특정지역재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p> <p>가.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이루어지는 것</p> <p>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 기타 시설의 정비 또는 복지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업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공단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재생추진법인(같은 항을 제외하고 이하 단순히 "지역재생추진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기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p> <p>다. 노후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 또는 공용시설의 제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p>

출처: 일본 「지역재생법」, e-GOV 법령검색(접속일: 2021.4.30.).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창의적 제안 등 국토분야 이론과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시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1-16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I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연 구 진 박경, 허동숙
발 행 일 2021년 7월 27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